SSK 동아시아 복합조직 연구모임 2월 8일 모임

참석자 전재성, 신욱희, 손열, 도종윤, 김어진, 이보미, 송지예, 옥창준

발제자 전재성, 「국제정치 조직원리 : 무정부상태anarchy, 위계상태hierarchy, 제국empire」

1. 문제제기

- 냉전이 끝나고 나서, 단위나 조직원리에 대한 논의들이 제기. 미국과 유럽의 주류/방계 국제정치학자들 역시 이에 대한 문제의식과 문제설정을 하고 있음. 동아시아의 관점에서 볼 때, 이는 이미 하고 있던 작업들이며, 이에 대한 한계들이 있는 것도 사실. 오늘은 hierarchy(웬트에 의해 정리)와 empire(네그리의 제국<포스트콜로니얼 제국론)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것.

2. 개념화의 문제(Martin Hall, Jack Donnelly, John Hobson, Barry Buzan)

- 현재주의, 반역사주의, 유럽중심주의, 국가중심주의 (신현실주의의 현재주의 비판, 무정부상태를 과도하게 해석함)

- 도낼리의 경우, “multiple forms of hierarchy in anarchy and diverse parctices of sovereign inequality"

- anarchy의 반대는 'archy' not 월츠 식 hierarchy.

- sovereign의 적용을 받지 않는, outlaw state, empire, semi-sovereign

- Hobson은 1648-2000년까지의 국제정치는 hierarchical sub-systems, unlike units 개념으로 설명. (오누프의 글 원용), 역사사회학적 접근의 필요성.

- 부잔의 경우, structural differentiation의 차원 필요성 강조, 내부 정치구조가 조직된 상황에 따라 단위의 정치성격상의 변수가 나온다. Adam Watson의 논의를 빌어, 고안적으로 다양한 조직원리가 하나의 세계에 상존할 수 있는 가능성. 동아시아의 경우, structurally differentiated된 측면이 있다. 부잔의 4사분면 체제로 보면 안 된다.

- 서구 주류 학자들의 관심 분야는 유럽 제국과 비유럽 관계. 구성주의, 문명담론의 강조, 유럽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, 21세기 미국 제국론.

- 유럽연합 역시 19세기 문명 표준의 시각에서 다시 보려는 시도. 탈근대 조직원리의 한 구성요소로서 전근대를 상정하는 경우.(Hartmut Behr)

- 제국 건설에 대한 영토적 관계에 대한 질문(Alejadro Colas) 미국 제국은 영토와 관계가 없다.

- 공식제국과 비공식제국(오스만/청 제국과 서구 제국 비교, Jesse Dillon Savage)

- 무정부상태로만 위계상태의 유지를 설명할 수 없음, 적절성의 논리와 구성주의적 해석이 필요하다.(Jack Donnelly)

- 가족담론의 지속성, 과거 식민지 시대의 가부장적 담론이 탈식민시대의 가족담론으로 이어져서 관계가 지속되는 것을 설명(Andrew Phillips)

- 자오팅양의 천하세계 논의(William Callahan)

3. 연구 방향 설정

- 전근대, 근대, 탈근대의 국제정치 조직원리 개념화.

- 각 지역, 시대별 역사적 흐름에 대한 역사사회학적 연구

- 실증주의적 방법과 구성주의, 해석학적(프레임워크에 대한 감정이입) 방법의 조합

-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역사적, 복합조직원리 시각 연구

4. 우리 앞에 놓인 상황

- 동아시아 단위들의 진화과정 및 현재 다양한 단위들의 공존 현상.

- 이를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들

- 조직원리 개념의 정교화 및 이론화 틀 구성

- 여타 지역과의 비교

- 동아시아 방향에 대한 규범적 연구 및 협력 방향 제시

이후 토론 과정

손 : 한 가지 드는 생각은, 복합조직원리(empire-anarchy 사이의 여러 가지 모습). 이게 역사사회학적이든 어떤 방식이든, 그런 formation이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다. 우리가 못 봤던 혹은 국제정치현상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그것이 한 측면인데, 그렇다면 왜 이게 무엇이 작동했길래, 이런 모습이 되었는가.

신 : dynamics가 없을 수 있는 위험성.

손 : 동아시아의 조직원리가 empire와 hierarchy가 아니라고 볼 때, 그것이 발생하는 source가 무엇인지 궁금하다. sovereign inequality도 잘 와닿지 않는다.

신 : informal empire와 같이 붙어다니는 개념 아닌가. autonomy의 반대말로서의 heteronmy.

전 : 브레즈네프 시절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의 관계를 이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. de jure와 de facto sovereign의 차이.

신 : 냉전기 한미관계, 지금의 북중관계.

손 : 이를 sovereign inequality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지 확신이 들지 않는다.

신 : Alternative, RIS/ EJIR는 구성주의에 너무 포맷이 맞추어져 있음. 역사학적 접근이 좀 약하다는 측면이 있음. 국제정치논총에 대한 서평 논문을 쓰면 좋을 듯. 개인적으로는 heteronomy. 왈츠에 대한 러기의 비판을 어떻게 upgrade를 할 수 있으며, 이를 동아시아적 상황에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. Family Discourse가 재미있다. 결국은 체제의 복합과 구조의 이야기를 할 때에도 물질적인 측면, 관념적인 측면이 상호연관되는 지를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음. 역사적 진화과정까지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, 단순조직원리가 혼란을 초래하는 이유를 보고 싶다. 단순조직원리-복합조직원리. 문제해결적 관심사를 놓치지 않으면서, 단위-제도-구조-비교의 형태로. 3월-4월 초에 발표를 하겠음. <세계정치>에 2015년에 한 꼭지식 실어보면 어떠냐.

전 : 신 선생님의 지적처럼 dynamics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.

신 : 맞다. 그렇지 않으면, 정책적 함의도 적고, 맥락도 없이 보일 수 있다. 보편적으로 작동했던 원리가 어떻게 동아시아에 적용되고, interact하고 그 점을 이야기해보자.

도 : 무정부-제국 간극을 채워가는 것이 무엇인가. 제국이 단위인가, system인가? 단위나 체제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인가? 현재의 유럽은 지역인가? 체제인가? 단위인가? Behr의 논문이 재밌다. 자율성의 변화가 단위, 체제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. actorness. actorship. 단위/체제를 쉽사리 구분하지 어렵다. 단위 속성의 변화가 유럽화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.

전 : Empire는 그 자체가 체제이기도 하고, 단위이기도 하다. 내부와 외부의 조합으로 보면, 단위적 속성과 체제적 속성. 하지만 EU가 이것보다 복잡한 것은 사실.

신 : 없어지지 않는 경계가 있다는 것. 그것이 복합화되는 것이고, 중첩되는 것일 수는 있어도 없어지지는 않는다. 동주 선생이 <미래의 세계정치>에서도 유럽연합의 경험이 기존의 단위를 대체한다고 보지는 않았던 것 같다.

전 : EU가 제국이다, 라고 말하면 sovereign의 주체가 국가냐?

도 : 영국의 경우, 그렇게 본다. EU의 경우, ‘변태’의 과정이 길다.

신 : EC와 EU의 목표는 다르지 않는가?

도 : 국격의 변화 역시 단위의 속성 변화 아닌가? 국격의 변화가 역할도 변하게 되고.

전 : 캘러한의 논의가 재밌다.

신 : 영국학자들 역시 중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.

전 : 장용진, 듀드니가 대표적.

김 : 문명국가의 일반원칙, 법의 원칙은 그냥 들어가있다. law도 아니고, order 사이의 과정도 같이 보면 재밌지 않을까.

송 : 제국 논의를 보면서, formal하고 informal를 굳이 차이를 두고 봐야 되는지, 사실은 formal 안에서는 영국-일본, 직접 지배-간접 지배를 두고 일본을 비판하는 경우도 많은데, 영국이랑 일본이랑의 차이가 그렇게 큰가?

신 : 미국을 empire로 볼 수 있을 것인가? informal empire와 hierarchy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? 수용자의 측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?

도 : 강제적인 의존이 되는지, 물리적인, 강제적인 의존. 소통의 문제.

이 : 주권이란 개념을 어떻게 보는가? 아무래도 중국이나 북한을 보면, 주권에 대한 인식이 매우 민감하다. 이를 어떻게 봐야할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.

옥 : 중국, 북한의 경우, 우리식의 인권 개념이 강한 것도 국가 주권과 연결시켜 살펴볼 필요가 있을 듯.

도 : 한국의 경우, 인권은 어떻게 보는가?

신 : 주권이라는 말은 원래 개인의 권리. 국제법이 들어오면서 국가의 권리라는 말을 쓴다.

전 : 인권이라는 말은 안 씀. 민권이라는 말이 있었다. 인권개념이 부각된 것은 민주화 운동 시기라고 봐야 할 것.